文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공직 기강 엄하게 잡을 것"

"검찰, 공정 사회 만들기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

尹 "검찰개혁,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의 기강을 더욱 더 엄하게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훨씬 더 공직을 긴장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모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나도 기대를 많이 한다.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며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거나 괴롭히거나 '갑질' 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이 갖는 하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또 그만큼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는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개혁에 관한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지금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놓일거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발한발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어왔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겠다"며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어떻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 씨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평화당 "바른미래 · 정의 · 녹색 · 청년당 등과 연대해 총선 승리"

DJ 서거 10주기 맞아 DJ 생가 방문… '하의도 선언' 공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들 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연대 또는 연합체를 구성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사안별 정책연대와 선거연합 및 합당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평화당은 2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0주기를 맞아전남 신안 하의도 DJ생가를 방문해 이른바 '하의도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화당이 DJ 정신을 계승, 이어나가겠다는 포부와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담겼다. 내년 총선을 다른 당과의 통합, 연대를 통해 치르겠다는 것도 하의도 선언의 일환이다.

평화당은 우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나고 자란 하의도에서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당의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결의한다"며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치철학과 가치는 오롯이 김대중 정신에 담겨있다. 우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평등의 시대가치를 포용해 김대중의 이상을 확장한다"고 하의도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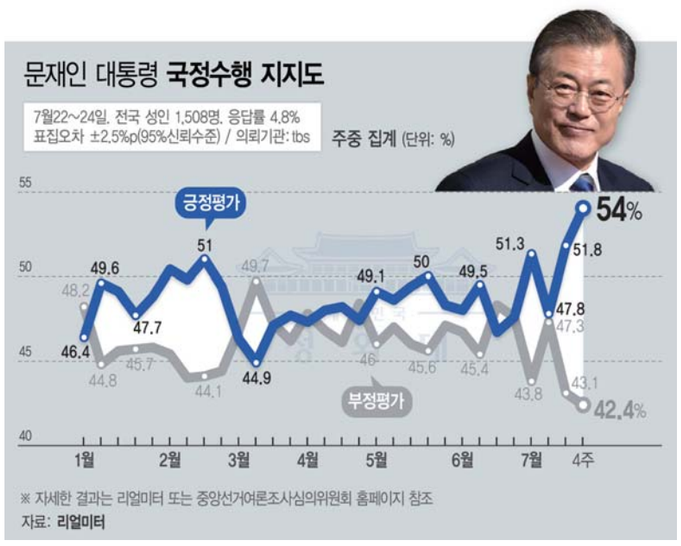
그러면서 ▲젊은정당으로 탈바꿈▲모두를 위한 민생정치 · 경제민주화 추구 ▲연동형 비례제 · 분권형 개헌 등 합의제 민주주의 제도화 ▲호남개혁정치 통한 지역균형발전 완수 ▲햇볕정책 계승으로 평화체제 구축 등의 목표를 전했다.

평화당은 "김대중은 한국 현대사 한복판에서 노동, 인권, 민주화, 평화통일 모든 길의 맨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어왔다. 우리는 담대한 변화를 만든 김대중의 젊은 DNA로 무장하고 평화당을 젊은 정당으로 바꿀 것"이라며 "특권경제를 타파하고 중산층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대중경제체제를 실현해 나라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김대중의 경제론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다. 모두를 위한 민생정치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다당제 기반 합의민주주의로 발전시킬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부수고 더 큰 통합과 연대의 정치를 위해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호남개혁정치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을 통해 정치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완수하고 햇볕정책과 실용외교를 계승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협력, 평화체제를 기필코 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통합과 혁신을 위한 당내 '큰 변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당내 인적쇄신 · 인재영입으로 총선 승리 기반 마련,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녹색당 · 청년당 · 시민사회단체와 이슈 및 사안별 정책연대 및 인적교류,공동연대로 정치개혁 추진, 선거연합과 합당으로 총선 승리 등의 실천 전략도 밝혔다.

신봉우 기자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54.0%

반일 여론 확산에 9개월래 최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상승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가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실시한 7월 4주차(22~24일) 주중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54.0%(매우 잘함 32.0%, 잘하는 편 22.0%)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내린 42.4%(매우 잘못함 26.7%, 잘못하는 편 15.7%)를 기록했다.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인 11.6%포인트로 벌어졌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째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1주차(55.4%) 조사 이루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일 감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취한 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전 · 세종 · 충청(43.0%→53.6%, 부정평가 39.2%) ▲서울(52.6%→58.4%, 부정평가 39.3%) ▲경기 · 인천(55.1%→57.5%, 부정평가 39.2%) ▲20대(50.8%→56.1%, 부정평가 40.0%) ▲60대 이상(35.8%→40.2%, 부정평가 54.4%) ▲30대(61.7%→65.5%, 부정평가 32.3%) 등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초기에는 진보층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보수층의 지지도 늘기 시작했다. 이번주에는 보수층(17.8%→ 24.5%, 부정평가 72.0%)과 진보층(78.4%→80.7%, 부정평가 17.0%)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지지율 상승세는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일 감정이 보수층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응 메시지와 활동

긍정 2.2%p 오른 54.0%

부정 0.7%p 내린 42.4%

수출 규제 반일 감정 확산

정부의 단호한 대응 영향

도 여론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 · 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 · 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3만1664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8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